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98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2월 20일 (음력 1월 14일) 수요일

혁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수완신도시 파오레
분양문의 062)367-3000

참여정부에서도 수도권 집중 여전

새 정부선 더욱 심해질 듯

■ 본보, 통계청·건교부 자료 분석 결과

참여정부가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지역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이런 가운데 새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를 폐지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수도권 집중현상 확대 등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본보가 최근 통계청과 건설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02년과 2006년의 인구와 산업 현황, 제조·서비스업체 수, 공공청사 등 9개 부문에 대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집중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인구의 집중도는 48.5%(2천378만명)로 2002년 47.2% 보다 90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48.5%)는 일본 31.9%, 영국 31.2%, 프랑스 18.9% 등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아 정부의 수도권 과밀해소 노력이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체 수와 서비스업체 수도 수도권 집중이 커지고 있어 여전히 창업과 취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의 집중도는 56.4%→56.6%(4천400개 업체 증가)로, 서비스업체는 45.7%→48.1%(1천300개 업체 증가)로 심화됐다.

정부출자기관 집중도는 93.8%로 지난 2002년 60% 보다 무려 33.8%나 늘었으며, 개별공공법인은 93.4%로 17.4%나 더 집중화됐다. 하지만 정부투자기관 집중도는 2002년 95.2%에서 4년 만에 88.5%로 6.7% 떨어져 대조된 양상을 보였다.

반면 지역총생산 집중도는 47.7%로 1% 감소했으며 자동차 총대수는 46.2%로 0.3%, 대학교 수는 39.3%로 1.2% 약화됐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난 40여년 동안 경제성·효율성을 중시한 수도권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최초의 시도로 기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남발전연구원 이건철 기획경영실장은 "참여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국가 핵심과제로 추진, 기틀을 마련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 폐지 및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를 중단하고, 지역의 재정 상태에 따른 차등지원을 부여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목포 조기 풍어 지난 2004년부터 5년째 조기 풍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 동명동 부둣가에는 요즘 조기잡이 배들이 귀항할 때마다 참조기를 그물에서 떼내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인부들은 시간당 1만원~1만2천원을 받으며, 1인당 하루 10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정국 급속 냉각

장관 인사청문회 파행 불가피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인의 협상 도중 내각 인선 발표 강행으로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이 결렬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정치권이 책임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불법 청문회에 들러리 설 수 없다는 태세여서 장관 청문회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마지막 각료들의 사표를 임기 내에 수리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두 정부간 어색한 동거가 잠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측이) 발목을 잡고 뒷다리를 거는 바람에 (새 정부가) 뒤뚱거리면서 출발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 않겠다는 오만한 자세다"고 맞받았다. 이처럼 정치권이 극한대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역시 파행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불법 청문회에 들러리 설 수 없다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새 정부의 각료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정식 임명될 때까지 참여정부 마지막 각료들의 사표를 임기 내에 수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9일 13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무임소 국무위원 후보자 2명 등 국무위원 후보자 15명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암학원 창학 55년 역사의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광주·전남 교원 인사 명단 인터넷 광주일보에

호남 물갈이 최대 관심

민주당 체제 정비 … 공천 신청 착수

정책의장 최인기

통합민주당은 19일 4·9총선 후보자 선정을 위한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박재승) 구성을 완료하고, 공천 신청 접수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5면〉

총 12명으로 구성된 공천심사위원에는 박 위원장을 포함해 김근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박경철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이이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인병선 짚풀생활사박물관장, 중소기업 대표격인 장병화 ㈜가락전자 대표이사,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등 7명의 외부인사가 포함됐다.

대통합민주신당계 추천 내부 공심위원에는 김부겸 이인영 의원, 민주당계 추천 내부 위원에는 최인기 최고위원, 김충조 전 의원, 황태연 동국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통합민주당은 이날 오전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천 방향과 원칙 등을 밝힌 뒤 당사에서 공천심사위원 임명장 수여식과 1차 회의를 갖기로 했으나, 공천의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일정이 연기됐다.

통합민주당은 신계륜 김충조 등 양당 전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소위를 구성해 공천 세부기준, 후보자 추천과 재심, 비례대표 추천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한 뒤 공천심사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의장에 최인기 의원, 총선기획단장에 신계륜 사무총장, 기획단 부단장에 정봉주 의원과 박선숙 전 환경부차관, 이상환 전 민주당 기획조정위원장 등 3인, 공동대변인에 우상호 의원과 유종필 전 민주당 대변인, 새정치국민운동본부장에 조성우 전 민화협 상임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http://marathon.kwangju.co.kr ▶문의: (062)220-0541

여수엑스포 '먹구름'

해수부 폐지 이어 지원 특별법도 위축

국가 지원범위·국고 투입액 크게 줄어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내용이 국회 농해수위 통과과정에서 크게 위축돼 국가 지원범위와 국고 투입액이 대폭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특별법의 변질은 새 정부가 여수박람회 전담부서인 해양수산부 폐지에 이은 조치로,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에 차질이 우려되고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안을 수정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2조 박람회 지원시설은 '그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사업시설, 박람회 주제 관련 연구 및 제조시설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갯벌생태체험관 건립(4천억원) 등 여수 박람회와 연계하려던 제반 관광시설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

농해수위는 또 제6조 4항 '박람회 개최도시의 교통시설 및 도시경관조성사업을 위해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를 '국가는 연계 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박람회장 인근의 도시경관 조성사업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여수시 전체의 교통시설이 아니라 박람회장 주변의 교통시설로만 규모를 축소한 것이다.

농해수위는 또 제25조 인접지역 경관 정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제34·38·39조의 박람회 지원시설의 지원, 사업 시행 및 승인을 '국가'가 아닌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수정해 민자유치 사업의 대외 공신력을 약화했다.

정부 측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재정부담과 다른 국제행사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지원범위 축소 등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박람회 개최시 중앙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질의하자 "중앙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SOC사업의 조기 완공과 박람회장 조성 등 박람회 직접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역할에 한정하고 지원 시설 등 민간시설은 민자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여수박람회와 관련해 국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며 "박람회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해수위에서 수정 의결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고등법원 판사를 마지막으로 정든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사랑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학력 및 경력

· 광주동신고(19회) 졸업
· 서울대 법과대학(88학번) 졸업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연수원 27기)
· 군법무관(제12사단, 국방부검찰관)
· 광주지방법원 판사(민사, 형사, 합의부)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민사단독, 신청, 경매)
· 광주지방법원(형사단독)
· 광주고등법원(민사, 형사, 가사)

변호사 이 관 진 올림

■ 개업장소 : 광주시 동구 지산동 342-13 심산빌딩 203호 (법원정문앞)
■ 대표전화 : (062)228-2800 팩스 : (062)228-2802